

경제관계장관회의
24-14-3
(공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2024. 7. 23.

관 계 부 처 합 동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요약]

1. 추진 배경

- **(해외동향)** 인프라 신증설, 주택도시개발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 재정부담을 고려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

* [세계인구] 0.7%/연 ↑ ('20) 78억명 → ('50) 97억명 [도시인구] 1.37%/연 ↑, 44억명 → 67억명

- 중동은 PPP법을 제정('19년 UAE)하면서 시장규모가 대폭 성장했고 개도국의 PPP 시장규모*도 코로나 前 수준으로 회복(WB 등)

* ('19) 967억불 → ('20) 457억불 → ('21) 762억불 → ('22) 917억불 → ('23) 860억불

- **(필요성)** 투자개발사업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쏠 단계 주도

-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쏠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 또한, 도급사업(3~5%)보다 투자개발사업이 수익성이 높다(10% 이상)는 업계 평가

- 우리기업들은 국내 인프라·주택도시개발 등 투자사업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중이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 '19~'23)

☞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고, 건설 쏠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2. 세부 추진방안

1.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 **(정상외교 효과 극대화)** 정상순방 등 고위급 외교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 매년 전략 투자개발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

- **(공공기관 역할강화)**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

* 공공기관은 트랙레코드(대형 인프라 수행실적) 보유 및 저금리로 자금 조달 가능

- 공공기관(철도·도로·공항·주택 등)에서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 수립
-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및 공공예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KIND의 지원강화) 투자개발참여시 우리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확대(최대 30% → 50%)
 -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투자요건 개선*
 - * (현행) '우리기업 EPC 수주액'이 'KIND 투자금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투자가능
 - 기업 지분 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 허용

2 패키지 지원 강화

- (복합지원패키지)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 유·무상 ODA를 연계하고 정책금융·리스크 관리 등 패키지 지원
 - (ODA연계)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EDCF를 연계*하여 프로젝트화 촉진
 - * (예) ①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EDCF 재정발주사업,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투자개발사업
②EDCF는 VGF(건설보조금)·AP(고정대금) 지급, 무상 ODA는 설비·기자재 지원 등과 연계
 - (정책금융)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총 1.1조원 규모)
 - * 올해는 정부(1.1천억원) 및 공공기관(3.3천억원) 출자로 모태펀드(4.4천억) 조성
 -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수은 수출금융(대출·보증)도 연계 추진
 - (리스크관리) 리스크 조사·검증 신규지원*, 핵심사업은 MDB(다자개발은행)와 공동참여를 추진하고 기업 애로사항은 외교당국과 공동대응
 - * 기업 지원을 위한 '리스크관리 전담창구' 운영(KIND-해외건설협회 공동)

- **(시범사업 발굴)** 투자개발사업과 유·무상 ODA 및 정책금융 연계 등을 논의하는 실무기관 간* 협의체 운영('ODA-PPP 협의체')

* 구성 : KOICA(무상 ODA), 수출입은행(유상 ODA·수출금융), KIND(투자사업·PIS 펀드)

- 협의체를 통해 KIND 등이 투자를 검토 중인 사업, 유·무상 ODA 후보사업 등을 검토하여 연내 투자개발 시범사업 발굴

* (후보사업안) 베트남 도시개발, 방글라데시 교량, 라오스 공항 등
(※ 고위급 외교 성과 등을 고려해 후보사업 pool 지속 발굴예정)

3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 **(UGPP)** 고위급 방문 및 MOU 체결 등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추진

*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

-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 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
-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

- **(선도사업)** 베트남 정상순방('23.6) 후속성과 창출*(UGPP 7건)을 위해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

* ('23.6) 정상임석 하 UGPP MOU(5건, LH-베 5개省) → ('24.7) 베 총리방한 시 동남신도시 MOU(LH-베 박닌省) → ('24.7) 지원단 파견(단장 국토부장관) 시 국토부-베 건설부 MOU

- 입지가 좋고, 판교 신도시 규모인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권 확보 및 민관 합동 진출방안 마련

* (위치) 박닌성 일원(하노이市에서 약 31km)/ (면적) 850만㎡(약 257만평)
(내용) 계획인구 약 11만명의 도시개발(아파트·빌라, 상업·업무시설, 산단 등)

- 순방외교 효과로 Team-KOREA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되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진출 기대
- 동남 신도시가 우리기업(대기업~중소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적용

**해외건설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30년까지 투자개발사업 수주 100억불 달성**

전략		세부 추진과제
민관협력 거버넌스 마련	정상외교 효과 극대화	① 정상외교 성과창출 위한 전략국가·프로젝트 선정 ② 투자개발사업 수주 지원계획 수립
	공공기관 역할강화	① 사업 기획 및 초기 참여기반 마련(설계·자문 등) ② 공공기관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공공예타 등)
	KIND의 지원강화	① KIND의 대주주 참여 허용 ② 투자요건(시공수주 위주) 완화 및 기업 EXIT 지원
패키지 지원 강화	복합지원 패키지	① 유·무상 ODA, 수출금융 등 연계 지원 ② 리스크관리 강화(조사·검증 지원, MDB 공동참여 등)
	PIS 2단계 펀드 조성	① 총 1.1조원 펀드 조성('24년 모태펀드 4.4천억원) ② 분야별 투자할당 완화 등 운영개선
	시범사업 발굴	① 실무기관 협의체 운영(ODA-PPP 협의체) ② 협의체 등 통한 시범사업 발굴
도시개발 분야 특화진출 확대	G2G 프로그램	① 고위급 방문 등 G2G 협력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 ② 공공기관이 전 단계에 걸쳐 주도적 사업 추진
	성과창출 및 확산	① 정상외교성과 기반 선도사업 추진 및 성과확산 ②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기술 연계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강화	인센티브 강화	① 투자개발사업 실적 시공능력평가 반영 ② 수주통계 반영을 위한 실적보고 가이드라인 정비
	기업편의 제공	① 인프라협력센터의 기업 현지활동 지원 강화 ② 타 산업과 동반진출을 위한 공동 수주활동 지원

순 서

I. 추진 배경	1
1. 해외건설시장 여건 및 국내 동향	1
2.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필요성	3
II. 추진 방향	4
III. 세부 추진방안	5
1. 민관협력 거버넌스 마련	5
2. 패키지 지원 강화	8
3.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12
4.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강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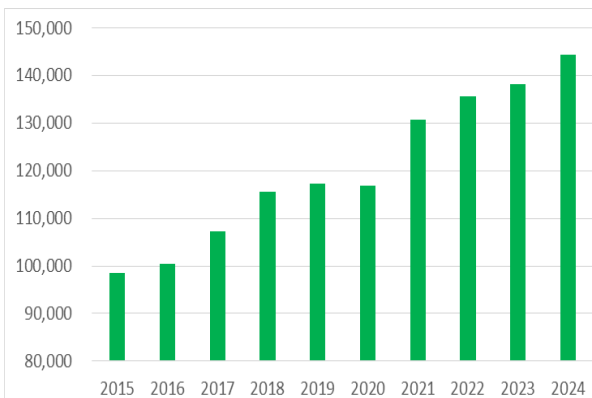
I. 추진배경

1 해외건설시장 여건 및 국내 동향

□ 해외건설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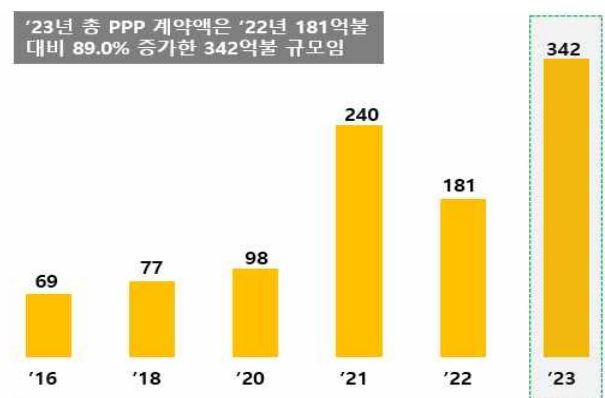
- **(성장전망)** '24년 세계시장 규모는 14.5조불 전망(전년比 4.3% 성장)
 - '50년까지 세계인구 및 도시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UN, '18)되며 주택·도시 및 관련 인프라 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
 - * [세계인구] 0.7%/연 ↑ ('20) 78억명 → ('50) 97억명 [도시인구] 1.37%/연 ↑, 44억명 → 67억명
 - 우리기업 강세지역인 중동에서는 고유가 기조로 인해 석유화학·가스플랜트, 원전과 같은 초대형 사업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발주방식)** 각 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중동은 사우디('21)·UAE('19) 등에서 PPP법*을 제정하고 수자원·전력·석유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PPP 시장 규모 대폭 성장
 - * (사우디) 입찰방법 규정(경쟁입찰·수의계약 등), 노동법(사우디인 의무고용 등) 면제 가능 등
 - 개도국의 PPP 시장규모*도 코로나 前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인도·인니·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증가(WB)
 - * ('19) 967억불 → ('20) 457억불 → ('21) 762억불 → ('22) 917억불 → ('23) 860억불
☞ 동아시아·태평양 59.8%, 라틴아메리카 18.4%, 남아시아 9.6%, 유럽·중양아 4.8% 등

<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단위 : 억불)>



[출처: IHS Markit('23.8)]

< 중동지역 연도별 PPP 계약액(단위 : 억불) >



[출처: 중동건설시장 전문분석기관 MEED('23.11)]

□ **우리기업 해외 수주동향 및 국내 동향**

- **(수주동향)** '19년에 최저치 기록('09~'23), '22년부터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300억불대 정체를 돌파할 추동력도 필요

* ('19) 223억불 → ('20) 351억불 → ('21) 306억불 → ('22) 310억불 → ('23) 333억불

-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기업은 총 156억불을 수주한 상황*

* 최근 3년 평균실적('21~'23, 147억불)보다 다소 높은 수준(+6.4%)

- **(수주형태)** 우리기업 해외건설 역량*은 지속 상승 중이나 여전히 도급사업 중심(94.7%, '19~'23)으로, 상위시장 진출은 미흡한 상황

* 우리나라 해외건설순위(매출액) : ('10) 7위 → ('17) 6위 → ('22) 5위(美 ENR, '23.8)

- 가격 경쟁 위주의 단순 도급시장에서는 중국·튀르키예 등과 경쟁 심화로 수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우리기업들도 단순 수급인 지위를 넘어, 사업 결정권을 가지고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개발사업 비중 확대를 모색 중*

* 기업들은 인프라 및 주택도시개발 등 국내 투자사업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 중

< 관심 기업들의 의견(투자개발 활성화 TF) >

- (A건설) 최근 투자사업팀 신설, 투자개발사업은 도급 대비 리스크가 높아 금융지원 등 필요
- (B상사) 도급사업 수익성 악화로, 최근 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C건설) 투자개발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EDCF 등 범정부 지원과 연계 필요

- **(국내동향)** 최근 공사비 상승 및 PF 위기에 따라, 건축 인허가 및 건설수주액이 '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20~'22년은 지속적으로 증가)

* 건축인허가 : ('20) 2.1% → ('21) 17.6% → ('22) 4.8% → ('23) -25.6% → ('24.1Q) -20.6%
건설수주액 : ('20) 16.6% → ('21) 9.1% → ('22) 10.1% → ('23) -19.1% → ('24.1Q) -4.9%

- 이에 따라, 주요기업들은 해외시장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기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 중

👉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고, 건설 숲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 '27년 500억불 달성 시 생산유발 35조원 부가가치 유발 11조원 취업유발 11.7만명(대외경제연 '24.7)

2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필요성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위시장 진출

-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 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의사결정 및 수주 가능
- 또한, 다수의 산업과 연계한 선단형 수주*로도 참여 가능

* (도시개발) 건설eng(도시계획·설계, PM·감리), 교통(도시철도·도로, 대중교통 시스템), 플랜트(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변전·송배전), ICT(CCTV, 스마트가로등, 통합관제) 등

☞ 투자개발사업의 수주가 전·후방효과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

- 이에 반해 도급사업은 사업 의사결정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발주되는 사업을 단순 수주하는 형태로 추가 수주효과 기대 無

< 네팔 UT-1 수력발전 수주사례('20년 수주) >

※ 남동발전 및 KIND의 지분투자(1.7억불 투자)로, 우리기업(두산에너지빌리티)이 EPC(3.6억불) 및 O&M(1.3억불) 추가 수주(4.9억불)

- | | |
|----------------------------|--------------------------|
| - (지분) 남동발전, KIND, IFC 등 | - (대출) 수은, 산은, IFC ADB 등 |
| - (EPC) 두산에너지빌리티(3.6억불 수주) | - (O&M) 남동발전(1.3억불) |

□ 도급사업보다 고수의 확보 가능

- 투자개발사업은 최저가 입찰 위주인 도급사업보다 수익성 高*
- (도급) 플랜트 5%, 인프라 3~5% 수익, (투자개발사업) 10% 이상 수익 추정(업계의견)
- 지분투자자로서 보다 유리한 사업조건을 직접 설정할 수 있고,
-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공기단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및 조기 매출창출 등 수익성 개선도 가능

* (예) 해외도로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공기가 지연되는 경향(계획대비 평균 1.6배), 국내기업 투자개발사업은 조기준공(튀르키예 A 사업 : 당초 대비 20개월 단축)

- 또한, 전반적 프로젝트 경영능력(금융조달~시공)이 필요해 도급에 비해 경쟁이 제한*적이라, 수주확률이 높고 출혈경쟁 우려 低

* 도급사업은 5~10:1, 투자개발사업은 3:1 수준의 경쟁률을 보임(업계의견)
[싱가포르 B 도급사업 평균 6.6:1 vs 카자흐 C 투자개발사업 3:1]

II. 추진방향

해외건설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30년까지 투자개발사업 수주 100억불 달성

전략		세부 추진과제
민관협력 거버넌스 마련	정상외교 효과 극대화	① 정상외교 성과창출 위한 전략국가·프로젝트 선정 ② 투자개발사업 수주 지원계획 수립
	공공기관 역할강화	① 사업 기획 및 초기 참여기반 마련(설계·자문 등) ② 공공기관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공공예타 등)
	KIND의 지원강화	① KIND의 대주주 참여 허용 ② 투자요건(시공수주 위주) 완화 및 기업 EXIT 지원
패키지 지원 강화	복합지원 패키지	① 유·무상 ODA, 수출금융 등 연계 지원 ② 리스크관리 강화(조사·검증 지원, MDB 공동참여 등)
	PIS 2단계 펀드 조성	① 총 1.1조원 펀드 조성('24년 모태펀드 4.4천억원) ② 분야별 투자할당 완화 등 운영개선
	시범사업 발굴	① 실무기관 협의체 운영(ODA-PPP 협의체) ② 협의체 등 통한 시범사업 발굴
도시개발 분야 특화진출 확대	G2G 프로그램	① 고위급 방문 등 G2G 협력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 ② 공공기관이 전 단계에 걸쳐 주도적 사업 추진
	성과창출 및 확산	① 정상외교성과 기반 선도사업 추진 및 성과확산 ②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기술 연계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강화	인센티브 강화	① 투자개발사업 실적 시공능력평가 반영 ② 수주통계 반영을 위한 실적보고 가이드라인 정비
	기업편의 제공	① 인프라협력센터의 기업 현지활동 지원 강화 ② 타 산업과 동반진출을 위한 공동 수주활동 지원

Ⅲ. 세부 추진방안

1 민관협력 거버넌스 마련

- ◇ 정부의 지원전략 수립, 공공기관 역할 강화 등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우리기업과 선단형 수주 추진

① 정상외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전략 수립

- 정상외교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망 투자개발사업이 최종 수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 성과창출 가능성 및 민간기업 진출의향 등을 바탕으로 전략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마련

* 해외건설촉진법 상 국토부 장관은 분야별 진흥계획 수립 가능

- 전문 공공기관(철도·도로·공항 등) 및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선도적 역할과, ODA·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패키지 포함
 - 관계부처 ODA 심의절차 등(~'25.下)*을 거쳐 지원사업 등 확정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외교부), EDCF 심의위원회(기재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조실) 등

② 공공기관 역할 강화

- (사업기획)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

* 공공기관은 트랙레코드(대형 인프라 수행실적) 보유 및 저금리로 자금 조달 가능

** 민간기업은 투자개발사업 국내외 트랙레코드가 거의 없어 선진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낮고, 주요 진출국의 '官 주도' 특성 상 단독으로는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려움 존재

< 공공의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성공·실패 사례 >

성공	• 카자흐 알마티도로 PPP 입찰 시 도로운영 트랙레코드가 있는 도로공사가 지분투자 및 O&M에 참여해 우리 민간기업(지분투자·EPC)과 함께 수주
실패	• 캐나다 철도 PPP 입찰 시 PQ 통과를 위해서는 철도개발·운영 실적이 필요하나, 민간기업만으로 PQ 통과 어려워 참여 불가(* 공공기관만 관련 실적 보유)

□ **(기반마련)**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가 투자개발사업 및 시공·기자재, O&M까지 **쏠 분야 민관 동반진출로** 이어지도록 전략적 기반 마련

- 공공기관(철도·도로·공항·주택 등)에서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역할*, 민간 연계 진출 방안 등을 미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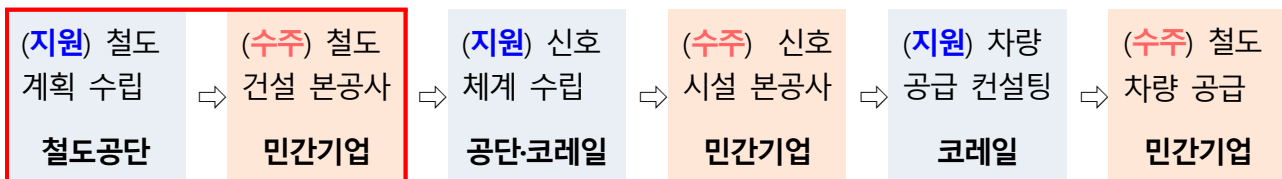
* 우리기업 동반진출을 위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지분율 확보 (단독투자로 부족 시 KIND 연계 등 추진), 사업구조 검토, 시설 운영관리 등

< 예시 : 우리기업 동반진출 견인(인니) vs 제약 사례(필리핀) >

구분	인니 바탐 항나딤공항	필리핀 마닐라 공항
개요	T1 개보수 및 T2 신설, 운영·유지관리	T1~T4 확장·개보수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비	약 6천억원(인국공 486억원 지분투자)	약 4조원(인국공 802억원 투자)
지분	인국공(30%) / 인니 공항운영 공기업 (51%) / 인니 건설 공기업(19%)	인국공(10%) / 필리핀 산미구엘(33%) / 필리핀 재무투자자(57%)
동반 진출	설계 및 감리 수주(ENG社 컨소시엄) 면세점 진출(A社), 기자재(B社) 수출	인국공의 낮은 지분 으로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이 있어 설계 수주 실패

- 국토교통 ODA 등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신뢰 형성 및 초기 진출기반 마련

※ (예: 철도) 공공(공단^{건설}·코레일^{운영})+민간(ENG社 철도차량기업, 시스템장비 업체 등) 동반진출



□ **(제도개선)**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경영평가 및 공공예타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경영평가) 평가기준 중 ‘민간기업과 동반 해외진출 노력·성과 등’ 예시*에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추진

* (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동반수주 투자개발사업’ 등

- (공공예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KDI) 등 추진

③ 해외인프라 · 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지원강화

< 그 간 KIND 역할에 대한 업계 기대 및 평가 >

◇ 업계기대와 달리 **투자규모가 적어 리딩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에 편승**하는 등 비판 有

구분	대주주 허용	사업외연 확대	사업발굴 강화
문제	▶30% 이내 지분투자 한도로 인해 프로젝트 리딩 불가	▶EPC 수주효과가 있는 사업에 한해 KIND 투자 가능 ▶기투자 사업 지분인수 불가	▶민간기업 발굴 사업에만 편승하고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
개선	▶지분투자 한도 상향(30→50%) 하여 대주주 참여 허용	▶우리기업이 참여한 사업의 EXIT 지원을 위해 브라운필드 허용	▶추가 협력국 발굴 등 자체 사업발굴 기능 강화

□ **(대주주 허용)** 우리기업이 원하는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사업화 되고, 우리기업이 지속 리딩하도록 KIND가 대주주로서 지원할 필요*

*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이익(EPC 수주액의 10%) 수준에서 투자, 대주주로서 참여 곤란

○ 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한도를 상향(30→50%)하고
‘국내 투자자 중 대주주 불가’ 규정을 폐지

* 현재는 KIND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국내기업이 존재해야 KIND 투자 가능

□ **(사업외연확대)** ‘시공수주’ 위주의 KIND 투자요건*을 기자재·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개선

* (현행) ‘우리기업 EPC 수주액’이 ‘KIND 투자금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투자가 가능

○ KIND가 우리기업 기투자 지분 인수로 EXIT(자산유동화)를 지원*하고 수익성 있는 브라운필드에도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

* 업계는 자금회수에 장기간 소요되어 부담을 느끼는 상황 → EXIT 지원을 통해 업계 부담을 낮추고 신규 사업(그린필드)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

□ **(사업발굴강화)** 공공기관인 KIND가 주도적으로 해외정부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규 투자사업 적극 발굴

○ 現 협력국가(방글라 등) 외에도 필리핀·우즈베크 등 추가 협력국을 발굴해 상대국 정부(또는 PPP 기관)와 협의체 운영 및 사업 발굴

* (예: 방글라) ‘19년부터 협력, 공동사업(5건) 발굴 → 우리기업의 우선 사업협상권 확보

** PPP 제도가 미비한 국가는 법제화 지원(KSP 등)과 병행해 사업발굴

- ◇ 투자개발사업 후발주자인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무상 ODA 및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추진

* 선진국은 ODA와 투자개발사업을 연계(Blended Finance)해 금융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

1] 복합 지원패키지 제공

- (ODA 연계)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무상 ODA를 연계하고 정책금융 등 패키지 지원

※ (업계평가) 우리나라는 무상 ODA, EDCF와 우리기업 후속 사업수주와의 연계 부족
- 무상 ODA는 초기사업 발굴(사업계획 등)에, EDCF는 수원국의 단순 재정사업에 집중

- (사업발굴)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에 각 부처 ODA 등을 활용하도록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반영

* (인니 신수도) 인니에 KCN(스마트 물관리 기본계획) 지원 → 상하수도 시설 PPP 제안(수공) EIPP(신수도 인근 태양광발전) 지원 → 태양광 사업 제안(KIND 등)

- (사업구조보완)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EDCF를 연계*하여 프로젝트화 촉진

- i)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EDCF 재정 발주 사업으로,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거나*

* (도시) 상업성 無 : 공공 인프라(상하수도·전력·진입도로 등) → EDCF 재정발주
상업성 有 : 부지개발, 주택, 상업시설 등 → 투자개발사업(우리기업 투자)

- ii) 전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①EDCF는 VGF(건설보조금) 및 AP(고정대금) 지급과, ②무상 ODA는 설비·기자재 지원 등과 연계 추진

수단	지원내용
VGF	• 정부에서 건설초기 건설보조금 형태로 일시금으로 프로젝트 SPC에 지급
AP	• 건설된 시설 운영수입은 정부가 수취, 시설 유지관리 대가로 사업자에 고정대금 지급
현물	• 설비·기자재(예: 태양광 ESS)를 무상지원하여, 건설·운영 본사업을 우리기업이 수주

- iii) 사업자(현지 SPC 등)에 대한 EDCF 직접 지원*도 활용

* EDCF 제도개선('24.5월)으로, (기존) 수원국 정부·중앙은행 등 보증서 要 → (개선) 기업 자체 신용으로도 지원 가능

※ 무상 ODA 및 EDCF 외에도, 수은 수출금융(대출·보증) 연계도 추진

□ (리스크 관리) 투자개발사업은 도급과 달리* 국가상황에 따라 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 추진

* (예) 환전·송금제한, 전쟁 및 내란, 현지정부의 몰수, 계약불이행 등

** 도급사업은 공사 진행 상황(기성)에 따라 보수 수취 가능

○ (사업검토) 기업들이 국가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리스크관리 전담창구' 운영(KIND-해건협 공동)

- 핵심국가에 대한 심층정보를 상시 수집·제공하고, 기업이 요청하는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 Risk Survey) 지원을 신규 추진

○ (사업화) 국가별 특성에 따른 회수 및 재투자 방안 등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F/S) 지원

- 핵심 전략사업은 G2G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MDB와 공동참여** 추진(글로벌 프로젝트 化)

* 특히 MDB는 해당국 정부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MDB가 참여하는 국제적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평가(업계의견)

** 이를 위해 KIND-MDB-MIGA 간 사업·리스크 정보 공유 등 공동 투자협력플랫폼 구축

○ (사업추진) 리스크관리 전담창구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외교 당국과 공동대응*하고, 핵심사업은 상시 모니터링

* 외교부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통해 기업 요청사항을 현지 공관 등에 전파하고, 진출국 정세 등 국가 리스크 관련 정보를 입수해 관련 기업 등에 공유

○ (리스크 대응) 리스크 현실화 시 외교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고위급 G2G 채널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

2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

□ **(펀드조성)**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투자 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펀드(1단계)를 조성·운영 중('19~)

○ 연내 1단계 1.5조원 투자사업 발굴이 완료될 예정으로, 지속적 투자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2단계 펀드 1.1조원 조성 착수

* 현재까지 미국·사우디·베트남·말레이시아 등 21개 사업에 약 1.1조원 투자 완료
→ EPC 등 1.5조원의 후속 수주효과 창출 중(투자 후 EPC 수주까지는 1~3년 정도 소요)

○ 올해는 정부(1.1천억)·공공기관(3.3천억) 출자*로 모태펀드(4.4천억) 조성, 내년부터 민간투자(6.6천억)를 매칭하여 총 1.1조원 펀드 조성

* 도시·교통·항만 등 인프라 관련 공기업, 금융 공기업 등 약 10여개 기관
☞ 주무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 협의를 거쳐 출자 추진

< PIS 2단계 펀드 개요 >

■ 정부재정과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를 조성한 후, 모태펀드와 민간투자를 매칭하여 하위펀드를 조성하고, 하위펀드를 통해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출자 등 투자



* ① 블라인드 펀드 : 투자자모집 후 사업을 발굴, ② 프로젝트 펀드 : 사업발굴 후 투자자를 모집

□ **(운영방안)** PIS 1단계와 달리, 플랜트·건설·인프라 간 투자 할당 (칸막이)을 대폭 완화하여 우리기업이 선호하는 사업에 보다 집중 투자

○ 공공기관이 선도 디벨로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일정 부분 투자하는 하위펀드를 신규 조성하고(수주강화펀드)

○ 우리기업의 신규 계약(EPC, O&M 등) 뿐만 아니라 기투자사업의 지분인수까지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지원범위 확대

③ 투자개발 시범사업 발굴

- **(협의체 신설)** 투자개발사업에 특화하여 유·무상 ODA 및 실제 사업 연계 등을 논의하는 실무기관 간* 협의체 구성('ODA-PPP 협의체')

* 구성 : KOICA(무상 ODA), 수출입은행(유상 ODA·수출금융), KIND(투자사업·PIS 펀드)

- 실무기관 간 지원국가 선정 및 지원현황·시기, 사업범위 조정 등을 긴밀히 협의* 하여 지원 간 원활한 연계 및 패키지 마련 추진

* 제도마다 지원시기·목적, 사업범위·절차 등이 다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

- **(F/S 패스트트랙)** EDCF와 투자개발사업 간 연계를 위해 전체 프로젝트 관점의 타당성 조사 수행이 필요*

* (예) 상업성 없는 구간(EDCF) + 상업성 있는 구간(투자개발사업) → 전체 프로젝트 추진

- 협의체를 통해 EDCF(수은)와 투자개발사업(KIND) F/S 평가요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내용을 공유하여 신속한 절차 추진

- **(시범사업 발굴)** KIND 등이 투자를 검토 중인 사업, 유·무상 ODA 후보사업 등을 검토하여 연내 투자개발 시범사업 발굴

- 패키지 지원 모델을 정립하여, 정상순방 등 고위급 외교 후속 성과 창출 등*을 위한 투자개발 전략 프로젝트 지속 발굴

* 고위급 외교성과 및 우리기업 희망사업, 공공기관 발굴사업 등 후보 pool 지속 관리

< 투자개발 전략프로젝트 후보 사업(안)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 추진현황	연계 지원방안 검토
방글라 교량	9억불	상대국과 G2G 협력을 통해 우선협상권을 확보	EDCF와 연계해 건설보조금(VGF) 등을 지급
라오스 공항 개선	4.2천만불	상대국 정부 제안에 따라 우리 인프라 공공기관에서 F/S 검토 완료	무상 ODA를 통해 발주처 입찰자문 지원, 시스템 솔루션·기자재 제공
베트남 신도시	검토 중	협력 MOU 체결 및 F/S 추진	무상 ODA를 통해 계획수립 등 지원

3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 고위급 외교 등을 통해 G2G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민간기업 참여 유도

* 성공적 도시사업은 여타 사업보다 매우 높은 수익창출 可(수십% 수준)

1 도시개발에 특화된 G2G 프로그램 정립

□ (UGPP*)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위한 중장기 지원 추진

*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

○ (기반마련) 고위급 방문 등을 계기로 전략국가를 선정, G2G 협력 MOU를 체결하고 경험공유를 위한 정책자문 등 추진기반 마련

○ (사업추진)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

-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

- 여타 투자개발사업(3~5년)보다 사업기간이 길고(20년 이상), 대규모 금융이 소요되므로 무상 ODA·EDCF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

* (예) 수익성 낮은 구역 또는 필수 공공인프라(상하수도·전력 등) 등에 대해 지원

< UGPP 기반 도시개발 사업모델(예시: 베트남) >

절차	사업기반마련		⇒	사업발굴·계획수립		⇒	사업구조 구체화 + 인허가 + 착공	
주체	한국토부	베건설부		한공공기관	베지방성		한공공+건설사	베건설부+지방성
세부 내용	MOA 체결 (스마트시티 및 Social Housing 공급) * LH↔베지방성 간 MOU (정상 임석)			A 건설 프로젝트 B 건설 프로젝트 C 건설 프로젝트			- SPC 출자 - 자금조달 (정책자금 메뉴판) - 공공기관(LH 등) - 사업관리 - 건설사 - 시공, 분양	
법정부 지원	- 정책자문 -EIPP, KSP 등			- MP 수립·타당성조사 - EIPP, KCN(계획형) - KOICA·국토교통ODA - KIND·수은 F/S			- 스마트서비스 : KCN(솔루션형) - 금융조달 : EDCF, KIND 투자-PIS, ECA 등	
							- 베트남 건설부 - 법, 제도 지원 - 베트남 지방성 - 사업지 선정 - 인허가 - 토지보상	

② 도시개발사업 성과창출 및 확산

- **(선도사업)** 베트남 정상순방('23.6) 등 국가 간 협력과제의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베트남신도시**를 도시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
 - 입지가 좋고, 판교 신도시 규모인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권 확보 및 민관 합동 진출방안 마련****
 - * (위치) 박닌성 일원(하노이市에서 약 31km)/ (면적) 850만㎡(약 257만평)
(내용) 계획인구 약 11만명의 도시개발(아파트·빌라, 상업·업무시설, 산단 등)
 - ** 이와 함께, 베트남 순방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SPC 출자 등을 진행
 - 순방외교 효과로 **Team-KOREA**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되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 추진
 - * 올해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고, 내년 입찰과정 전반에 베 정부와 긴밀히 협력
- ☞ 동남 신도시가 우리기업(대기업~중소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남신도시 관련 그 간 추진경과 >

- **베트남 정상순방('23.6)** : 양국 정상 임석 하 UGPP(도시개발협력프로그램) MOU 체결
- **베트남 총리방한('24.7)** : LH와 박닌성간 동남신도시를 명시한 도시개발 협력 MOU 체결
- **민관합동 지원단 베트남 파견('24.7, 단장 국토부장관)** : 베 건설부·박닌성 당서기 등 고위급 면담으로 사업구체화, 베 건설부와 동남신도시 협력 MOU 및 실행계획 체결

- **(성과확산)** 진출 필요사업 또는 국가 추가발굴로 **1호사업 성과확산**
 - (베트남) UGPP를 체결한 나머지 4개 중점 추진지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주도로 3~5만호 규모의 신도시 프로젝트 등 진행
 - * 박닌성 띠엔 주현지구, 흥옌성 리트엥켓 도시구역, 타이빙성 도시, 산단 개발 등
 - (기반마련) 고위급 외교결과 등 제반여건을 고려, 전략적 진출 필요국가를 추가선정(연 1~2건)해 UGPP MOU 체결 및 사업발굴
 - * 르완다 키갈리 그린시티 등 주요국 관심이 집중된 사업에 대해 선제적 진출전략 마련 필요
 - (공공역할) 고위급 외교 성과 확산을 위해 사업시행 관련 공공(LH 등) 역할을 확대

◇ 사업 발굴·시행 관련 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인센티브와 제반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투자사업 추진역량 강화

□ **(시공능력평가 반영)**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

* 건설사업자의 공사수행 역량을 금액으로 평가한 지표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및 민간공사 시공사 선정, 건설사 신용평가·보증심사 등에 활용

○ 사업 수주(투자) 시, 기업은 시행자로서 발굴·금융조달·시공 등을 주도해 프로젝트 경영능력을 입증하므로 '경영 평가액'에 반영*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수주통계 개선)** 기업들이 개별 해외 투자개발사업 특성에 맞춰 수주실적을 용이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 시공계약 위주의 수주보고 체계로 인해 출자금, 연계수주 등 투자개발사업 실적 정보 부재

○ 투자개발사업 통계 시범생산('24.12) 및 시공능력평가 시 활용 가능

□ **(현지지원강화)**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7곳) 기능을 개편하여 센터 운영기관에 관계없이 투자개발사업 발굴지원 수행*

* KIND 운영(5개, 투자개발사업 발굴) : 인니, 베트남, 케냐, 방글라, 사우디, 해건협 운영(2개, 도급 수주) : UAE, 페루 ☞ 모든 센터가 투자개발·도급사업 모두 지원토록 개편

○ KIND·해건협 外 인프라 공공기관 직원도 파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지 정보수집 및 네트워킹 등 제반 수주활동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현지법인 설립비용(파견비·대행사 수수료 등) 지원, 임시 사무공간·이동편의 제공 등 현지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 추진

□ **(유관산업 동반진출)** 인프라 건설·투자 뿐 아니라, IT·스마트팜·제조업 등 타 산업 분야와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 수주활동을 지원*

* 해외시장 공동조사, 공동 수주활동비, 국내외 전시회 공동참가 등 협력활동 추진

** (예) 해외건설스마트팜 동반진출 관련 MOU 체결('23.3) 및 국토부농식품부 공동 간담회 개최('24.6)

추진 내용	담당
[추진방안1] 민관협력 거버넌스 마련	
1. 정상외교 효과 극대화	
1) 정상외교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국가·프로젝트 선정	국토부
2) 투자개발사업 범부처 지원계획 수립	국토·기재·외교부 등 관계부처
2. 공공기관 역할 강화	
1) 사업기획 및 초기 참여기반 마련	국토부, 인프라 공기업 등
2) 경영평가·공공예타 등 제도개선	기재부
3. KIND의 지원강화	국토부(KIND)
[추진방안2] 패키지 지원 강화	
1. 복합 지원패키지 제공	
1) 투자개발사업-유무상 ODA 연계	국토·기재·외교부 등 관계부처
2) 리스크 관리 강화(전담창구 신설 등)	국토부(KIND·해건협)
2. PIS 2단계 펀드 조성	국토·기재부, 관련 공공기관
3. 실무협의체 운영 및 시범사업 발굴	
1) 협의체 운영	KIND, 수은, KOICA 등
2) F/S 패스트트랙 마련	KIND, 수은
3) 시범사업 발굴	국토부(KIND 등)
[추진방안3]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1. 도시개발에 특화된 G2G 프로그램 정립	
1) MOU 체결 및 정책자문 등 G2G 기반마련	국토부 및
2)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발굴 및 추진	관련 공공기관(LH 등)
2. 도시개발사업 성과창출 및 확산	
1) 베트남 선도사업 추진	국토부, LH 등
2)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사업 지속 발굴	
3) 스마트 기술 연계 제공	
[추진방안4]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강화	
1) 시공능력평가 개선	국토부
2) 수주통계 개선	국토부(해건협)
3) 현지지원 강화	국토부(KIND, 해건협)
4) 유관산업 동반진출	국토부 및 관계부처